

민주,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매듭 '속도'

여당과 임시회 일정 협상
국힘 내부 동조 목소리도
조국당 "민주 주도해 주길"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매듭짓자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권심판' 민심을 확인한 국민의힘 일각의 동조에 특검법을 밀어붙이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여당과 임시회 일정을 협상 중이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회법상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의사 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한다면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4·10 총선 압승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라는 민심이라며, 특검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특검법 처리 필요성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당 일각에서도 '정권 심판론'에 쏠린 민심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표결에서 이전과 같이 반대표를 던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

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상병 특검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한라디오 방송에서 채상병 특검법 표결 처리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다"라며 "(찬성표 던질 계획에) 저는 그렇다"고 동의했다.

조국혁신당도 이날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주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번 총선을 관통한 열쇳말은 대파 875원, 입찰 막 그리고 '도주대사 런중심'이며 "국정을 바로잡았다면,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부 터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잡으려면, 하나씩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그 가운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굳이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이종섭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채 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민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이후,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박지원 "尹, 국힘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해야"

박지원(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총선에서 해남안도진도에서 당선된 박 전 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民心(민심)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검찰 정권을 부도처리했다"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 거국내각을 구성하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건희·이태원참사·채상병 특검을 논의, 합의해 22대 국회가 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물가, 자영업 영세상공인 농축어민의 이자감면 등 민생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특히 방송자유 보장을 위해 방심위 개편 등 모든 문제를 두 분 지도자가 매일 만나서 해쳐 나가야 한다"며 "지난 2년처럼 앞으로 3년 똑같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면 나라가 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혜 기자

이낙연 "당과 제 미래 재설계·재구축할 것"

이낙연(사진)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당이 계획했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다"면서도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 12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저를 포함한 새로운미래는 계획했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했다. 새미래 앞에 놓인 과제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국민과 동지들의 지혜를 얻어 당과 저희 미래를 재설계, 재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철저히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원과 지지자들을 위해, 헌신을 잃어선 안 된다. 그 헌신의 출



발이 됐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향한 그분들의 충정을 기억하면서 그걸 구현하도록 훨씬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의 숙제를 더욱 더 분명히 부각시켰다"며 "국가 생존과 국민 생활이 더 위태로워진 지금에 놓여있다. 그런 불행은 막고 대한민국 정상화, 민주주의 재건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미래는 4·10 총선에서 김종민 의원의 세종갑 지역구 의석만 확보한 채 비례대표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1.7% 득표율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송영길 "민주당·조국,尹 폭 탄핵해달라"

송영길(사진) 소나무당 대표는 22대 총선 결과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해 김건희 특검법 및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특검법을 통과시켜 특검수사로 밝혀지는 범죄사실로 윤석열 대통령을 꼭 탄핵시키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옥중에서 낸 성명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소나무당과 저 송영길에게 보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옥중출마임에도 저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지지해주신 광주 시민, 서구갑구민 여러분께 눈물 어린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검찰 범



죄정권을 심판할 의석 이만들어졌다"며 "송영길과 소나무당은 원내 진출이 실패했지만, 22대 총선을 윤석열 검찰 범죄정권 심판의 장으로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영길과 소나무당은 밖에서 윤석열을 탄핵하고 한동훈, 김건희를 법정에서 세를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22대 총선 광주 서구갑에 출마했으나 조인철 민주당 당선인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소나무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모두 한 석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22대 국회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김은지 기자



제22대 총선 전남지역 신정훈·이개호·서삼석·문금주 당선인 등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합동 참배를 위해 국립 5·18 민주묘지로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전남 총선 당선인들 "호남경제 살리겠다"

5·18 민주묘지 합동참배

제22대 총선 전남지역 당선인들이 지난 12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김원아·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공동선대위원장은 "호남의 압도적 지지가 과반 의석 확보에 큰 원동력이 됐다"며 "위대한 선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총선은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무대적인 현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 민생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이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이 주인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무도한 검찰 독재정권을 견제하고, 농어민 소득 보장과 잘 사는 농어촌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민주와 민생을 회복하고 호남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며 "특히 더욱 낮은 자세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는 정치, 정쟁이 아닌 일로써 승부를 보는 정치를 보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남도당 정권심판·국민승리선 거대책위는 합동참배 후 민주주의 문 앞에서 선대위 해단식을 가졌다.

최다선(5선) 박지원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재판 참석자 참배에는 함께 하지 못했다.

박지혜 기자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창당 45일 만의 기적에 감사"

조국혁신당 전남도당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결과는 심판의 시작이지 심판의 결과가 아니다"며 민생정치를 위한 포부와 지지를 보여준 유권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당은 "겸허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도당 창당대회 이후 선거일까지 겨우 45일 만에 성취를 이뤘다"며 "기적 같은 정당에서 기적 같은 열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진짜 할 일은 국민들이 위임하신 힘으로 현 정부의 무능과 독선 그리

고 부패를 끝까지 심판하고 책임지게 하는 일"이라며 "이번 국회 의석 구도 역시 21대 국회와 같고 갈라져 있는 진영의 갈등이라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속에 깊이 자리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 같은 구도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힘이 조국혁신당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도당은 비례정당에서 지역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도당은 "지역당은 중앙당의 결정에 단순 전달자이거나 조직동원의 역할에만 머무를 수 없다"며 "비록 지역구 의원은 없지만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회 제3당으로

서 지역 당원과 시민의 뜻을 모으고 확산하는 지역당의 역할이 없으면 민주당으로 독자적인 위치를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국혁신당의 미래에 대해 우리 내부는 물론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이르기까지 백가쟁명의 논쟁이 있을 것"이라며 "정해진 길은 없지만 국민들에게 세력과 자리다툼으로 비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가나간 3년을 지난 2년처럼 보낸다면 그 뒤에 심판은 먼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라며 "두렵고 엄중한 마음으로 국민께서 맡겨준 책임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지혜 기자